총체적 난국의 韓 경제… '바이파티산'으로 돌파해야

〈초당적 결의〉

민·관·정이 해야 할 일

반도체 너머 산업 전반 지원 필요
대기업-中企 상생 방안 찾아야

대내외 정세 갈등과 경기 악화로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지난 6월 기준 6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으로 경쟁력 상실 우려가 나오고, 지난달 소비판매 증가율 역시 -1.6%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으로 7월 산업지표도 어두운 실정이다. 수출 규제 갈등의 경우 국내에서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생·경제 활성을 위해선 정치·사회·경제를 총망라한 정치권의 중재·합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반도체만 집중… 산업 전반 지원 필요

4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발발한 반일감정은 의류·숙박·식품·문구·가전·영화·게임 등 분야에 걸쳐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무차별적 불매운동은 생활 소비 통로인 유통업계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란 게 재계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계 실적이 줄줄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 전반에 걸친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게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굳건했던 대형유통업체도 침체기에 들어섰다. 특히 증권가는 이마트가 올해 2분기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마트의 경우 올 1분기 19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업황 부진과 온·오프라인 간 출혈 경쟁 등 여파로 250억~3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도 4~6월 실적만 놓고 보면 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 설명이다.

'1등은 살아남는다'는 유통업계 인식이 깨지고, 대형점포는 사실상 벼랑 끝에 서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와 활성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중소·중견·지역 유통업체 지원안은 어느 정도 마련했지만, 대형유통 업체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 우여곡절 추경 처리

국회는 뒤늦게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5억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7월 대두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추경안 심사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치열한 정쟁과 심사 과정에서의 여러 논란으로 '늑장처리'와 '졸속처리' 두 가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한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것도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내 대책기구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촉진을 모색하고 있다. 또 최재성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을 추가하고, 전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을 필두로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별위원회 가동에 나섰다. 관련 정책·예산·입법 등에 속도를 내려는 행보다.

자유한국당도 국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권에 공조하면서 당내 특위도 분주하게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각 당이 저마다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정작 입법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는 의견이 달라 때를 놓치고 있다. 정치권에 '바이파티산(초당적 결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대-중기 상생안 찾아야

재계는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알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반도체 부품 관련 재고 확보 ▲수익성 다변화 대응 ▲신(新)설비 안정화 ▲대·중견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에 노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일환으로 국산 부품·소재 공급연계망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일감정 확산 등으로 국내 기업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국내에선 대-중소기업 상생 활성을, 국외 갈등에 대해선 양국 간 경영 악순환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러 실정을 감안하면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지난 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가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日 가마우지 경제' 탈피 돌입한 文정부

한일군사정보협정 재검토 '고심'

한일간 경제전쟁이 총성을 울렸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안보우방국)'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경제 제재 이유는 한일간 외교갈등의 골이 깊어졌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WTO(국제무역기구) 내 '수산물 분쟁' 등이 한일간 외교갈등의 예다.

한일간 경제전쟁이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핵심 보급로 차단'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우리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소재 및 부품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 체제'로부터 이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20년 전 일본이 오늘의 조치(화이트 리스트 제외·3개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등)를 취했다면 상황은 심각했을 것.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제2차장이 언급한 가마우지 경제는 우리나라 수출구조에 대한 취약점을 조류 '가마우지'에 빗댄 표현이다. 즉 우리나라가 핵심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면 이득이 일본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 정부에 있어서 핵심 보급로가 된다.

정부는 가마우지 경제 탈피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의 틀도 마련했다. 과거 박정희·김대중 정부가 강조했던 중화학 공업화 정책 및 소재부품산업 육성 전략을 김 제2차장이 언급한 것이다. 김 제2차장은 "우리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선언'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극복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소재부품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품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에 직면한 어려움을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자립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가마우지 경제 탈피 전략과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카드도 고심하고 있다. 김 제2차장은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22일 GSOMIA 1년 연장을 결정했다.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